

“친부·내연녀 법정 최고형 준비”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5가지 범률 위반 혐의 적용

5살 된 딸의 발목과 등을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30대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어떤 형량이 구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현재 고준희(당시 5세) 양의 친아버지인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5가지에 달하기 때문이다.

25일 전주지검은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밝혔을 당시 고씨와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체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씨 친어머니 김모(61)씨에 대해서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자정에 감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과 등을 발로 수차례 차고 짓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 사이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아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허위



25일 전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가 ‘고준희양 학대치사’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 ‘실종신고’를 하면서 20여일 동안 수천명의 경찰인력을 허비하게 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이와 관련, 고씨와 이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 시체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가 미

필적 고이나 부자위에 의한 살인보다 죄질이 더 나쁘고 실제로 맞다고 본다”면서 “아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인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수 있도록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TPO 공동회장 선임

김승수 전주시장이 아시아·태평양 도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TPO의 공동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국제적 위상이 높이지게 됐다.

전주시와 TPO(아시아·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는 24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86개 회원도시의 승인을 얻어 제8대 TPO 공동회장으로 선임되고 전주시가 공동회장도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TPO 공동회장과 공동회장도시의 임기는 2년이며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김승수 전주시장을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관광기구인 TPO의 관광총회 및 의결과정에서 TPO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TPO 공동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전주시는 앞으로 TPO 총회와 포럼, 공동관광마케팅 사

업 등 기구의 각종 회의와 행사를 주제하고 TPO 회원도시를 대표해 국제적 대외활동을 하는 등 글로벌 리더 역할을 기대했다.

TPO는 2002년에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도시 국제관광진흥기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도시 간 관광교류와 관광마케팅, 관광도시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중소기업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사전 수요조사 실시한 25개 업체 및 우수 혁신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접수한 후 현지 실태조사 등 심사를 거쳐 총 20개 이내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 30일까지

전주시는 올해 총 2억6,300만원을 투입해 균무환경이 열악한 중소업체를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드는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사전 수요조사 실시한 25개 업체 및 우수 혁신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접수한 후 현지 실태조사 등 심사를 거쳐 총 20개 이내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 전화(063-281-2351)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이철수 완산구청장, 객리단길 교통소통 대책 마련 현장점검

전주시 완산구는 25일 시민불편을 찾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구정 운영을 위해 객사길(객리단길) 주변 현장점검을 했다.

이철수 완산구청장은 관련부서인 경제교통과 과·팀장 등과 직접 객리단길(객사길~2길) 주변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 및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주변 교통 소통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채규남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앞

전주시 완산구 흥선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선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른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선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선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재중동포 청소년, 전주 매력 ‘흠뻑’

100여명 전주한옥마을 방문… 전통문화 체험

가장 글로벌한 문화관광도시 전주에 외국인 관광객과 재외동포들이 몰려오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중국동포 청소년과 교육자 등 100여명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전통문화의 정수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에서 주최, 흥시년(이사장 류종열)에서 주관한 ‘재중동포 청소년 한국방문 사업’의 일환으로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동포 청소년들의 모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교류를 확대해 민족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진행됐다.

참가한 재중동포 청소년과 교육자들은 전주한옥마을 함께 만들어

먹고 한복을 입어 보며 전주한옥미을 내 전통문화시설을 탐방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싱가포르 명문 고등학교인 래플스 고등학교(Raffles Institution)의 학생과 교직원 등 35명으로 구성된 수학여행단이 한국 전통문화와 도시정책을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는 등 기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체험하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재외동포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재외동포 이동·청소년과 교육자를 대상으로 재외동포 한국 전통문화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다. /채규남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시행

전주시, 중기 청년사업 2년간 300만원 적립시 지원

전주시는 25일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해 2018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추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과 이를 주고 청년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채용유지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자산형성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성화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완산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홍보

완산구는 25일 평화2동·삼천3동 주민센터에서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의 어려움과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20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절차에 의해 토지분할 및 단독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유토지 분할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